

## 재외동포청장, 대림동 찾아 중국동포 정착 현장 점검

- 서울·인천·광주·안산 간담회 이어 다섯 번째 국내 귀환 동포 간담회 개최

【관련 국정과제】 123.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국내체류동포지원강화)

-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3월 13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내 생활과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직접 의견을 들었다.
  - 이번 방문은 중국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대림동 일대를 직접 찾아 동포들의 생활 환경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간담회에는 중국동포단체협의회와 다가치포럼 등 동포단체 관계자와 교사·청년·학생 등 약 70명의 중국동포가 참석했다.
  - 또한 간담회를 계기로 중국동포단체협의회와 대한고려인협회 간의 MOU 체결식 및 공동체 상생 협력 선언이 이어졌다.
- 김경협 청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중국동포는 단순히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역사와 정체성을 공유하는 한민족의 구성원이자 우리 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 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정책을 개선하는 출발점”이라며 “재외동포청은 정부의 ‘차별 없는 포용’이라는 원칙에 따라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관계 부처, 지자체와 함께 검토해 국내 동포 지원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간담회에 참석한 동포단체 관계자와 청년·학생 등은 국내 생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책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참석자들은 체류 제도와 취업 환경, 자녀 교육, 지역사회 적응 등 국내 정착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를 공유하며, 정부와 동포 사회 간 지속적인 소통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중국동포는 “재외동포청이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을 찾아준 데 감사드린다”며, “동포 자녀 교육과 복지, 청년·유학생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 김경협 청장은 간담회에 앞서 대림동 일대 상권과 생활환경을 둘러보며 지역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노령층 중국동포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생활 상황을 살피고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중국동포를 비롯한 국내 귀환 동포와의 현장 소통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포용적 정착 지원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이날 행사 이후 중국동포 단체 다가치포럼이 주관한 ‘2026년 제1회 다가치포럼’이 열렸다.
  - 이 자리에는 재외동포청과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동포 체류 비자와 관련한 의견을 나누는 토론이 진행됐다.

붙임 : 국내 귀환 중국동포 간담회 및 민생현장 방문 사진 5부. 끝.

담당 부서	재외동포청 귀환동포정착지원과	책임자	과 장 이창원 (032-585-3280)
		담당자	주무관 김성환 (032-585-3283)
			주무관 김은혜 (032-585-3287)